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3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3.

발 의 자 : 오세희 · 서영교 · 채현일
박지원 · 김동아 · 이병진
전진숙 · 전현희 · 강준현
허성무 · 김문수 · 문금주
이광희 · 송재봉 · 신정훈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,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, 편의시설 설치, 이용수칙 고지, 이용료 징수, 차량·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,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고,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음.

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

도록 하고,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특별관리지역 지정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·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).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제4항 본문 중 “주민의”를 “주민과 소상공인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·보급하여 이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관리지역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 시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관리지역

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적용례) 제48조의3제10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제적 손실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) ① ~ ③ (생략) 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<u>주민의</u> 의견을 들어야 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-주민과 소상공인 등의-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⑤ ~ ⑨ (생략) <u><신설></u>	⑤ ~ ⑨ (현행과 같음) <u>⑩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</u>
<u><신설></u>	

<u>⑩</u> (생 략)	<u>는 지표를 개발·보급하여 이 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·운영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⑫</u> (현행 제10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	--